

#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난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줄고  
공공공사 물량 55% 이미 발주  
일부 업체 적자 시공도 우려

건설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 전망도 어두워 지역업체의 수주난이 우려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설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1.4를 기록해 기준선인 100에 크게 못 미쳤다. CBSI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체감경기지수로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 대부분이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CBSI는 절반 수준인 57.4에 그쳤다. 지난해 8월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CBSI가 13년 만에 100을 넘어선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건설경기 전망은 더 어둡다. 올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기관 공사

물량은 지난해보다 6,146억원이나 줄어든 3조4,24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2조5,627억원에 달했던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도 올해는 1조6,192억원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9,435억원 줄어들었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3,166건 5,891억원으로 전체의 86.1%나 차지해 수주 경쟁에 따른 일부 업체 적자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1분기가 지난 현재 남은 공사물량도 많지 않다. 올해 공공공사 물량으로 전체 3,676건 3조4,249억원이 풀릴 계획인 가운데 1분기에만 2,505건(전체의 68.1%), 1조8,975억원(55.4%)가량이 이미 발주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남은 공사 물량은 1,171건(31.9%), 1조5,274억원(44.6%)에 불과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형공사가 부족하고 이미 많은 물량이 발주됐기 때문에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 400억 규모 'LTE-R' 원주~강릉 복선전철 도입

400억원 규모의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LTE-R)이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선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혁신적인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인 'LTE-R'을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선에 적용하는 시스템 상용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

다. 'LTE-R'은 4세대 무선통신기술인 LTE를 철도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으로 음성·데이터·영상 서비스를 고속으로 제공한다.

철도신호시스템 기반이 무선화돼 철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원주~강릉 철도 LTE-R 사업'은

400억원 규모로 철도중앙제어센터 설비와 기지국 설비, 단말기 등으로 구성된다.

250km/h급 LTE-R 시스템을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선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표준화작업과 지난 2월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전 규격공개를 시작으로 평가·협상 등을 통해 6월 계약을 체결한다.

안은복 rio@kado.net

# 복선철 건설노동자 건강보험 논란

## 건설노조 강원본부 “조사 결과 가입자 전무” 주장

### 철도시설공단 “확인 필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단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건설노조)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한 달간 강원지역 일용직 건설노동자 8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단 한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측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일 40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공제부금 가입률이 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는 특히 강릉 철도기지창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과적으로 운행 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 미가입 등 위법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 공사현장이 불법천지로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 전 현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면 고발 조치 함은 물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감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4일 오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등의 주장은 발주 때 4대 보험 등 가입 내역서가 들어가야 해 있

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설노조측 주장은 계약상 이견으로 판단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정성원 jswzokook@kado.net

## 강원랜드 선금 지급률 최대 70% 확대

### 입찰공고문 명시 시행

###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

강원랜드(대표 함승희)가 정부 방침에 맞춰 공사와 용역·물품 제조계약 기업에게 지급하던 선금 지급률을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계약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자금 부담을 덜어줘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며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비롯해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랜드는 선금 지급률 확대를 위해 계약이행세부기준에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등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선금 지급 관련 문구를 명시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선금 지급시 계약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구매계약 담당자는 “선금 지급률이 확대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돼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선금 지급과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 발생시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선금 활성화 이행 협약식에 참석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력업체와 함께 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선/방기준 kjbang@kado.net